

5·18진상조사위 ‘전남대 암매장’ 본격 조사

3공수 부대원 암매장지 좌표 진술 확보 과정서 정황 파악 광주역 시신 5구·전남대 정문 2구·시청 인근 등 18구 등 이학부 뒷산·공대 뒷산 등으로 옮겨 묻었을 가능성 조사

대통령 직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력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전남대를 지목,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 진상조사위는 최근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공개한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지 식별이 가능한 이른바 '8계단 좌표'에 대한 3공수여단 부대원 진술(광주일보 10월 8일 1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남대 암매장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진상조사위는 11일 5·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행방불명자 등이 전남대 교내에 암매장된 정황을 담당부서인 조사2과를 통해 공식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위가 착수한 과제는 모두 3건으로, ▲전남대 이학부 뒷산 암매장 ▲전남대 공대 뒷산 암매장 ▲전남대 교정 여고생 추정 암매장 등이다. '이학부 뒷산 암매장' 사건의 경우 희생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지금까지 알려진 희생자 이성규씨가 맞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계엄군 철수 후 전남대 교정에서 고등학생 시신을 발견, 소지품과 고교생 사망자 현황 등으로 이씨로 추정했지만 유족, 선배 등 관련자 진술로 다른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아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진상조사위는 또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관련 검찰조사와 2007년 국방부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3공수여단 군의관과 의무병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5살 가량된 어린이가 전남대 공대 뒷산에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당시 3공수여단 본부대장인 A소령은

조사위는 특히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발포로 인한 시신 5구, 21일 전남대 정문 앞 발포로 숨진 시신 2구, 당시 광주시청 인근 18구 시신 등이 전남대로 옮겨져 묻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25구의 시신에 대한 검시 자료 분석도 진행중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2007)에 따르면 3공수여단의 '광주 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에는 작전 결과에 따른 피해로 '민간인 2명 사망, 5명 부상'(폭도의 차량공격에 의한 자체 피해)이라고 적혀 있다. 3공수여단은 지난 1980년 5월 20일 9시 50분께 광주역에서 경계중인 제3공수여단 16대대 정관철 중사가 시위대의 차량에 깔려 사망하자 최세창 여단장(준장)의 지시

로 각 대대에 M-16 실탄이 배부됐다. 또 전남대에 주둔한 3공수여단은 정문을 돌파한 시위대를 향해서 사격을 실시했다. 1988년 3월께에 작성된 군 문서에는 계엄군의 최초 사격을 5월 21일 10시 전남대 정문이라고 적혀있다. 당시 문건에는 사격은 무장시위대 10여만명이 차량 100여대를 앞세운 공격에 따른 대응 사격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목격자, 3공수 장병들의 진술 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중"이라며 "가해자 본인 부대원들의 진술 거부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의 '굴욕'

경찰청장이 국감서 사과한 부실수사 2건이 지역 발생

경찰 총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경찰 수사에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 공교롭게도 모두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인·여고생 강간치사 사건으로, 그 자체로서 광주·전남 경찰의 '굴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8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초동대처를 문제삼는 국회 의원을 지적해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의 경우 "현장 경찰관이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유족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의붓딸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중학생 A양이 친모와 의부에게 보복살해 당한 사건. 경찰은 A양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양은 결국 숨졌다. 지난 2018년 9월 10대 청소년인 B양이 모텔에서 10대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도 경찰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피해여성은 한 달 전에도 남학생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지만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단순 주취 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넘겼다. 김 청장은 "이 사건들 이후 중요한 사건의 경우 키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가한 광주 복구 선별진료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된 11일 오후 광주 복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들 오늘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들이 책임자 처벌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11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부터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반복되는 기아차 취업사기,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집회를 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는 경찰의 사건 수사에 미흡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검찰에 강도높은 수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99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원회는 최근 주변 A씨와 목사 B씨 두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 외에도 연루된 다른 목사들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수도관 복구업체 직원이 현장서 수리비 요구 물의

상수도관 시설 수리 및 복구업체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리비를 사고 현장에서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관 수리비 징수는 사업자인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만 가능해도 원칙을 무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한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중인 A씨는 실수로 상수도관을 파손했다.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에 파손 신고를 했고, 1시간여 후에 복구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복구를 마쳤다. 하지만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줄 알았던 복구업체 직원이 A씨에게 수리비 70만원을 요구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만이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토록 한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 징수를 할 수 있지만, 용역업체인 복구업체가 현장에서 수선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칙에 어긋난 것은 맞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

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상수도 시설 복구는 파손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복구를 마친 업체에 복구비를 지불하는 관할 5개 시설사업소의 업무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징수한 복구비는 본부의 세외 수입으로 잡히고, 5개구 시설사업소는 관련 예산이 있지만 극히 적어 용역업체에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를 야기해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어차피 지급해야 할 복구비를 복구업체가 현장에서 받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구업체가 A씨에게 요구한 금액과 문제 이후 실제 상수도사업본부가 징수한 복구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구업체의 A씨는 현장에서 70만원을 요구받았지만, 현장 입금을 거절한 A씨에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징수한 금액은 60만원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도마에 오른 광주지법 안일한 행정·비위

공탁금 국가 귀속 전국 최다·6년간 비위 공무원 전국 두번째

사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광주지법의 비위 행태와 안일한 행정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 귀속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최근 6년 간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도 수원지법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1일 공개한 '법원 공탁금 국고 귀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올해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아 국가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 건수가 26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의 귀속 건수는 서울중앙지법(2296건), 수원지법(1933건)보다도 많

았다. 대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탁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으로, 광주 법원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다른 법원에 견줘 많은 비위 공무원 적

발 통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내놓은 '2015년~2020년 8월까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는 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원지법(26명)을 제외하곤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이후 2018~2019년에도 각각 2명씩 징계를 받았고 올해에도 1명이 수천만원대 송달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파면되는 등 매년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